

# 국회, 8~10월 전국순회 ‘개헌 국민토론회’

### 개헌특위 4단계 로드맵 마련...이달말부터 매주 소위 개최

### 내년 2월 합의안·6월 투표...선거구제 개편 등 진통 예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 여야 합의의 개헌안을 도출하기 위한 일정표를 마련,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헌특위가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앞두고 작성한 향후 활동계획안에 따르면 개헌 특위는 ▲소위원회 ▲지방공청회 ▲기초소위원회 ▲전체회의 등 크게 4단계 절차를 거쳐 개헌안을 집중 논의한다.

소위원회는 6~8월 제1소위와 2소위를 재개해 분야별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와 의견을 분류한 뒤 필요할 경우 소규모 공청회를 개최, 자문위원이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소위는 6월 말부터 매주 화요일, 2소위는 수요일 회의를 개최, 소위 단계의 합의 및 쟁점 사항을 분류한다. 이어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5~10회의 지방공청회를 개최, 지역별 개헌에 대한 목소리를 청취한다.

10월에는 성별, 세대, 지역, 정치성향을 고려해 다양한 국민을 초청, 개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대국민 ‘원탁토론회’를 실시한다.

이 토론회는 국회 잔디광장에서 2000여 명이 참석해 테이블 당 10명이 앉아 토론하면 관련 의견을 메인 무대에서 취합·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헌특위는 지방에서도 원탁토론회 개최 여부를 검토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7월 17일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개헌특위 웹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다. 같은 날 전직 국회의장과 4부 요인을 초빙한 국가 원로 대토론회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8월과 11월 초 대국민 여론조사를 2차례 실시해 개헌 공감대 형성 여부와 국민의식의 변화 추이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이런 과정을 거쳐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개헌특위 위원 중 10명 이내의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뒤 조문화 작업을 통해 헌법개정안 초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또 기초소위 초안을 토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개정안 성안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헌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내년 2월까지의 여야 합의의 개헌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의 개헌안 도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개헌에 앞서 선거구제 개편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여야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표기 등을 놓고도 여야의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개헌 문제는 정치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을 수반할 것”이라며 “결국 국민 여론에 따라 개헌의 전방적인 방향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제재·대화 병행 北 비핵화 이끌어야”

### 강경화 외교부장관 취임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은 19일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제재와 대화를 모두 동원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고 갈수록 고도화되며 시급해지는 북핵·미사일 문제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헤쳐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당면 현안을 지혜롭게 해결하여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서 “일본과는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무엇보다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외교는 국민의 의지가 담긴 외교,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라며 “그간 외교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의 외교정책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해 취해 온 노력이 충분했는지 검토히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보다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가진 인적자원의 확보를 통해 조직 역량을 확충하고 인사혁신도 추진하겠다”며 재외 공관장 및 내부 직원의 ‘외부수혈’ 확대 의지도 피력했다.

연합뉴스

# 4당 원내대표 회동 ‘신경전’

### 여 “협조를” vs 야 “사과를”...이산가족상봉 결의안 처리 합의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19일 정례회동을 열었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때문에 신경전을 겪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강 장관 문제에 대해 “강 장관은 국민의 지지가 높고, 국민과 야당 사이에 어떻게 선택할 지의 지점으로 와서 여당으로서도 정리가 어려웠다. 그걸 이해해주면 국회를 원만히 이끌어갈 수 있다”며 야당에 호소했다.

이에 한국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야당이 무조건 따르는 것이 협치가 아니다”며 “대통령이 청문회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에 ‘참고용’이라고 언급했는데, 그렇다면 국회가 참고기관에 불과하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00번 양보해 청와대와 정부가 먼저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야당의 합리적이고 진정성 있는 주장을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협치”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청문회 문제는 간단하다. 대통령이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면 된다. 여당도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할 책무가 있다. 무작정 감싸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4당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추진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중앙당 후원회 부활 등이 골자인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되는 일반법안도 심사되는 대로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박지영기자 jpark@

# ‘강경화 후폭풍’ 野 보이콧...청문 일정 올스톱

### 김현미 보고서 채택 무산

### 김상곤·조대엽·김은경 일정 연기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강행의 후폭풍에 19일 국회 상임위가 연쇄 파행되는 등 몸살을 앓았다.

당장,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들이 상임위에 불참,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연기됐다.

또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지 못했고 환경노동위원회도 조대엽 고용노동부·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우선 국토위는 이날 한국당과 바른정당 간사가 의원총회를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면서 자연스럽게 전체회의를 열지 못해 김현미 장관 후보자의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교문위도 보수 야당들의 불참으로 전체회의를 열지 못해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도 채택하지 못했다.

한노위도 이날 조대엽·김은경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의결을 논의하려 했으나 개의하지 못했다. 의사일정을 보이콧 중인 한국당과 바른정당 외에 국민의당도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때문이다.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도 이날 오전 전체회의가 무산되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

이처럼 여야 대치 국면이 심화되면서 국회 상임위 활동이 언제까지 마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정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의원들의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등에 대한 야 3당의 반발과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 선언으로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가 모두 무산됐다. /연합뉴스

상임위 마비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정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의원들의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등에 대한 야 3당의 반발과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 선언으로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가 모두 무산됐다.

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표명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어렵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설정했다.

야당들은 20일로 예정된 운영위원회에 조국·조현욱 청와대 수석출석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은 뒤 국회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소집되더라도 임무보고가 안전으로 합의되지 않기에 청와대(수석들의) 출석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청와대도 조국·조현욱 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에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여야의 대치는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두 최경환 의원 명예 하의면민된다

### 신안 하의~신의 연도교 개통...한국당·국민의당 의원에 면민증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연도교가 개통하는 날 동명인(同名異人)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소속인 두 명의 최경환 의원이 명예 하의면민이 된다.

19일 전남도와 신안군에 따르면 오는 26일 하의~신의의 잇는 연도교(삼도대교)가 개통한다.

신안군은 이날 개통식에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에 각각 명예 하의면민증을 주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최 의원은 영·호남 의원 모임인 동서화합포럼의 DJ 생가 방문

등을 계기로 연도교 개통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그는 호남 의원을 이끈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와 함께 포럼에 참여한 영남 의원의 수장 역할을 하며 동서 교류를 주도했다.

특히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지역개발 특별회계 150억원을 투입해 연도교 사업비 승통을 트이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국민의당 최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하의도를 제2의 고향삼아 중앙 정부와 가교 구실을 담당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유한회사 J&Y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자산]**

## NPL채권 매입하여 투자 수익에 참여하실 분

- ▶ 총 매입금액 : 11억원
- ▶ 1인 2,000만원 이상
- ▶ 투자금 회수기간 : 6~8개월
- ▶ 근저당설정 조건
- 채권 물건지는 투자하시는 분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지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 유한회사 J&Y 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